



문서번호 : 25-12-민생위-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5. 12. 23.(화)

전송매수 : 총 8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2. 23.(화) 14: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 쿠팡이 입점업체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보하고 이를 자사 상품의 기획·판매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남.
- 입점업체의 판매량, 고객 반응, 재고 흐름, 가격 변동, 광고 성과 등은 개별 사업자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업자산임.
- 그런데도 쿠팡이 이러한 정보를 우월적 지위로 취득·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을 골라내 모방한 자사 상품으로 전환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채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구조적 착취이며, 공정경쟁 질서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임.

- 이러한 행태는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임.
- 이에 쿠팡의 자사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 데이터 부당 활용 및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관계 당국의 전면 조사와 엄정한 제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함.

2. 주요 메시지

- 쿠팡은 입점업체 거래·성과·트래픽 등 영업정보의 PB 활용 의혹에 대해, 데이터 항목·접근 주체·기간·목적·내부통제 체계를 즉각 공개하라.
- 쿠팡과 PB 조직(시피엘비 등) 간 정보 공유·차단(파이어월) 체계를 외부 독립기관 검증으로 입증하라.
-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과 피해업체에 대한 실질적 배상·구제에 즉각 나서라.
- 관계 당국과 국회는 본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플랫폼의 ‘선수 겸 심판’ 구조를 차단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3.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12. 23. 화 14: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프로그램
 -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등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권호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카포스) 강순근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김진철 회장
 - 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병덕, 권향엽, 김남근, 김윤,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기자회견 발언문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한다!

그간 플랫폼의 탈을 쓰고, 직접 매입 상품(Retail)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의 로켓 배송으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해 온 쿠팡의 민낯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이 PB상품 운영 초기부터 쿠팡 입점 업체들의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쿠팡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판매 성과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의 기획과 판매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스스로를 플랫폼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대부분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에서 발생한다. 2024년과 2025년 공시 자료 및 시장 추정치를 종합하면, 쿠팡 전체 매출에서 직매입 상품의 비중은 약 80%, PB상품은 5~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쿠팡은 입점 업체의 데이터를 PB상품에만 활용했는가? 판매 성과가 검증된 입점 업체 상품을 선별해 직매입으로 전환해 자사 수익을 극대화해 온 것은 아닌가. 이처럼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스스로 최대 판매자가 된 사업자를 과연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한 운영 편의”가 아니라, 플랫폼 권력을 악용한 구조적 약탈로 규정한다. 입점 업체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상품 경쟁력과 고객 반응, 재고·주문 흐름, 유입 트래픽은 곧 장사의 생명줄이다. 그 정보를 한 손에 쥔 플랫폼이, 다른 손으로는 PB 상품을 만들고 확장하며 시장을 잠식했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약탈이며, 혁신이 아니라 반칙이다.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가, 아니면 자사 수익 확장을 위한 데이터 채굴 대상인가.

이에 우리는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다.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자사 상품 판매와 플랫폼 운영 간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자사우대·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며,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 반칙과 약탈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의 ‘선수 겸 심판’ 구조를 차단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라.

2025년 1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불임자료2. 기자회견 발언문

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권호현 변호사

저는 아직 탈팡을 못했습니다. K리그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데다, 맞벌이 부부 육아에는 당일 배송이 참 유용했고, 사실 기대가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쿠팡은 최저임금, 당일 임금, 4대 보험, 추가 수당을 제대로 챙겨줬습니다. 무엇보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동선 연구와 최적화로 빠른 배송을 가능케 하는 혁신은 높이 샀습니다. 2021년, 22년 4차례에 걸쳐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대체 쿠팡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하여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몇번 일해 일해보면서 느낀 솔직한 소회입니다. 아마존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한국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것도 웬만한 강단과 끈기가 없으면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안이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전면에서 꼼꼼하게 조작, 은폐, 불법을 지시하고 채근할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최근 사실상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심려가 크실 겁니다. 갑자기 스팸 전화가 많이 온다? 네. 맞습니다. 쿠팡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습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라는 구체적인 김범석의 지시 때문일 것입니다. 그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최근에 확인된 쿠팡의 데이터 탈취에 관한 증거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피해업체들은 “이상하다. 쿠팡이 우리 업체 데이터를 훔쳐가서 카피 상품을 더 싸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될만한 진술을 해줄 제보자들은 막상 쿠팡을 두려워했습니다.

1) 최근의 공익제보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그 위법성을 알면서도 몰래 사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2) 씨피엘비가 쿠팡에 데이터 값을 제대로 지불했을까요? 아닙니다. 연간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3) 나아가, 그 데이터는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점업체들에게 그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4) 경영정보를 실질적으로 강취했다는 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세상을 뒤늦게 쫓아갑니다. 법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주십시오. 쿠팡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수십만 소상공인이 모험을 통해 확보한 자신만의 제품을 팔기 위해 모여든 공적 광장,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쿠팡은 심판의 권한으로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뒤 돈이 될만한 패를 골라 직접 선수로 뛰며 승리를 독식해왔습니다. 탈취한 영업비밀인 장물을 자식인 씨피엘비에게 제공했습니다. 씨피엘비가 데이터 탈취를 하는 동시에 다른 판매자와 경쟁하면 큰일 난다는 법무검토를 받고는 교묘하게 비즈니스 플랜을 변경했습니다. 아마도 제3의 업체가 판매하는 것으로 하되 쿠팡의 이익은 더 많이 보장받는 형태일 겁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쿠팡은 모험가의 도전과 성공을 훔치는 파렴치한 절도 행위, 장물 거래 행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은 밤낮없이 고민하며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600만 소상공인들의 도전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열 번 시도해서 겨우 한두 번 성공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플랫폼에 앉아 그 성공의 결실만을 가로채왔습니다. 입점업체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개척한 시장에 쿠팡이 무임승차하여 PB 상품을 내놓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상단을 점령하며, 임직원을 동원한 허위 리뷰로 소비자를 기망했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임직원 동원 허위리뷰와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관하여 쿠팡에 1628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직 데이터 탈취와 그 이용에 관한 검토나 조사는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과기부, 개보위 등 부처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조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토록 부실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가졌다면, 쿠팡과 씨피엘비가 탈취한 영업비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누가 언제 뭘 샀는지, 뭘로 결제했는지 등 개인정보 또한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3자에게 부정하게 유출, 누설한 것이죠. 더욱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플랫폼은 이제 우리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좌우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밀려나는지는 화면 한 줄에서 결정되고, 소비자가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떤 상품이 팔릴지도 플랫폼이 정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플랫폼의 권력 남용은 더 이상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팡입니다.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이익을 취한 쿠팡의 행태는 플랫폼 권력이 어디까지 오만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개자가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으로 직접 이익을 독점하는 순간 경쟁은 훼손됩니다. 쿠팡은 플랫폼이자 최대 판매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검색 알고리즘과 노출 구조를 좌지우지하고, 후기까지 조작하며 소비자를 기만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해충돌을 통제하지 못한 제도 미비가 낳은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데이터의 사적 활용, 알고리즘 조작, 과로사 논란까지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혁신 기업’으로 포장하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막기 위한 로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책임으로 몸집을 키우고, 규제는 외압으로 눌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불공정 행위가 벌어진 뒤에야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에서는, 그 사이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며 봉쇄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독점적 플랫폼은 짧은 시간 안에 점유율을 확대하고, 한 번 형성된 지배력은 사후 규제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이 드러나고 과로사가 이어져도 쿠팡이 ‘서비스 중단’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했던 것 역시 이런 구조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한계를 드러낸 현행 법 체계를 손대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반칙을 저지른 뒤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반칙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사전 규제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으로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자사우대와 이해충돌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입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이미 공공재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시장을 설계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쿠팡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점과 반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땀의 결과물이, 우리가 밤잠 설치가며 축적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쿠팡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판매량, 고객 반응, 재고 흐름, 가격 변동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투자를 거쳐 만들어낸 장사의 생명줄이자 핵심 영업 자산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의 이러한 정보를 사실상 흡수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잘 파는지, 고객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뒤에서 지켜보다가, '돈이 되겠다.' 싶은 상품만 골라내 PB 상품으로 만들어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입니까?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반칙이자 구조적 약탈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단지 PB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거로 추측합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쿠팡이 로켓배송의 핵심인 자사 매입 상품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쿠팡은 스스로 플랫폼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대다수를 직매입과 PB 상품으로 올리는 거대 판매자입니다. 심판의 권한으로 선수의 비밀을 훔쳤습니다. 입점 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을 모방하고, 로켓배송 등을 활용해 판매량이 높으니 다시 노출 순위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쿠팡은 입점 업체들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사 수익 확장을 위한 데이터 채굴 대상으로 이용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상대 선수의 전략을 미리 다 보고 경기를 한다면, 어느 선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회와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쿠팡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주십시오.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며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4.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카포스) 강순근 회장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이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이 법과 책임을 피해 산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구조적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우월적 지위로 취득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플랫폼이 파트너가 아닌 시장 지배자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전문정비업계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플랫폼들은 배터리, 타이어, 엔진오일 등 정비를 전제로 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정비업 등록, 정비사 고용, 정비이력 관리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실제 정비는 외주에 맡기고, 문제 발생 시 “판매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반면 합법 정비업소들은 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고 정비 이력을 남기며 하자 책임까지 부담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법을 지키는 정비업소가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안전입니다. 정비 이력이 남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 정비는 사고 발생 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안전과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비를 전제로 한 플랫폼 상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출장 정비의 법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정비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영역으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카포스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지는 시장, 그 최소한의 원칙을 요구할 뿐입니다.